

# GATT 政府調達協定 加入이 重電業界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韓國電機工業振興會  
常 勤 副 會 長  
任 寅 柱

## I. 序 言

정부조달은 政府 및 직접적 統制를 받는 機關이 행하는 財貨의 購買, 리스 및 렌트 契約을 의미하며 政府調達協定은 GATT의 11個 多者間貿易協定(MT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중 하나로서 各국 政府조달제도내에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을 제거, 貿易擴大에 기여하기 위한 協定이며 GATT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는 경우 各 회원국의 政府 및 政府투자기관에서 구매하는 物품중 年間 구매 總액이 13만 SDR(약 1억원) 이상의 物品은 상호 국제입찰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 協정의 가입국은 美國, 日本, EC(9개국) 등 20개국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이중 開途國으로서

는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이 가입하고 있다.

政府調達協定에 가입하게 되면 國內 調達市場에 대한 外國企業의 진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우리 企業은 協定加入國의 調達市場에 진출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全世界적으로 政府調達市場은 그 규모가 비교적 방대할 뿐만 아니라 國家次元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에 수반되는 物資의 수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달물자의 入札을 둘러싼 세계 各國企業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美國과 EC등 선진국은 기존의 政府調達協定만으로는 自國企業들의 市場接近機會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고 보고 협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자국이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 서비스 분야등을 競爭對象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GATT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多者間機構의 활용과 병행하여 선발개도국에 대한 雙務的 次元의 조달시장 開放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GATT 政府調達協定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東京라운드(1973-79) 이래 세차례에 걸쳐 協定加入을 시도하였으나, 美國, EC, 캐나다 등 주요협상국들이 우리의 양허수준의 미흡을 이유로 추가양허를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加入協商은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정부는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회피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위치를 고양시키고 아울러 선진국 調達市場 參與를 통한 시장확대를 도모코자 政府調達協定에 加入을 申請해 놓고 있으며 UR의 정부조달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협상의 결과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展望된다.

현재 GATT 정부조달협정(초안)에서는 '93. 7. 1 발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부조달협상이 UR협상의 진전과 맞물려 '93년 이후 협상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미국의 Fast Track이 약 8개월 정도 연장되어 UR협상이 '94. 1월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어 정부조달협정 발효는 UR협상 타결 일정이 '94. 1월 보다는 다소 늦어진 '94. 7월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협상타결 지연에 따른 세계무역상의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95. 1월 이전에는 발효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UR에서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범위 확대가 타결될 경우 GATT 政府調達協定은 기존의 中央政府 외에도 地方政府調達 그리고 通信, 에너지, 運送 부문과 일부 서비스 부문에 까지 확대 적용될 것이므로 이것이 國內産業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II. 우리나라의 推進 現況 및 影響

우리나라는 政府調達協定에 加入코자 '79-'82기간 중 3차에 걸쳐 加入協商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調達廳을 양허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國內生産이 不可能하거나 비교적 國際競爭力이 확보된 품목을 중심으로 한 31個 품목(CCCN 4단위 기준)을 양허대상으로 제출하였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양허수준에 대하여 先進國들은 讓許品目的 구매총액이 미미하고 그들의 關心品目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相互主義 原則에 위배되므로 協定加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그 후 우리나라의 政府調達協定加入 論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이후로서 이는 주로 對美通商關係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美國은 1989년 소위 '슈퍼 301조 協商'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차별적 정부조달관행, 특히 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DACOM 등의 조달관행을 지적하고 政府調達協定加入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세계 10대 交易國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방지하는 동시에, 연간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정부조달시장 진출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協定加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90. 5. 25 GATT 사무국에 우리측 1차 가입(안)을 제출한 바 있는 우리나라는 '92. 6월 조달청, 통신공사(한전은 제외)을 개방 대상기관으로 우리측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안)을 확정 제출했으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政府調達市場이 開放되면 우리 업체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의 세계조달시장 진출은 활기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내업체는 필연적으로 해외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한 정

도의 시장잠식이 우려되며, 그 결과 해당산업의 성장 및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의 調達制度가 産業政策의 한 수단, 특히 중소기업 육성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실정으로 감안할 때 보완적 대책의 마련없이 政府調達協定에 加入하는 경우, 大企業들은 국내조달시장 개방의 반대급부로 海外調達市場으로의 영역확대를 도모할 수도 있으나 團體入札 경험 및 능력이 결여되고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일방적인 수요감퇴에 직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달시장 개방의 經濟·社會的 비용은 1차적으로 중소기업에 귀착 될 것으로 보여진다.

### Ⅲ. 重電機産業의 現況과 問題點

중전기산업은 政府調達市場 開放에 따른 여파가 가장 큰 산업 분야의 하나로 예상되고 있다. 重電機分野는 아직까지 先進國들의 절대적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分野로서 이들 선진국들은 核心部品, 高技術, 高附加價値 製品을 生産·輸出하고 있다.

1992년 현재 우리나라 중전기산업의 수급규모는 약 7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공급면에서는 국내 생산액이 총수급액의 71.3%에 달하는 50억 달러에 머물고 있어 輸入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需要側面에서는 내수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2년의 내수비중은 전체 수요의 82%인 58억 달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출은 13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중전기 분야의 수급동향>

<단위 : 백만 \$ >

구 분		'90	'91	'92	'93(전망)
공급	생 산	4,983	5,233	5,035	5,417
	수 입	1,572	1,966	2,027	2,355
계		6,555	7,199	7,062	7,772
수요	수 출	957	1,140	1,273	1,450
	내 수	5,598	6,059	5,789	6,322

자료 : 상공자원부

내수중에서도 정부 및 政府投資機關의 調達比重은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韓電, 電氣通信公社 등에 의한 조달은 全體內需의 약 50%를 점하고 있는데 한전의 구매비중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重電機市場은 長期 電源開發計劃 추진에 따라 발전 및 송·배전 설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한전의 전력관리자동화 추진에 따른 자동화 설비 수요증대 등에 힘입어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어 2001년에는 생산규모 150억 달러, 수출 60억 달러의 중전기가 생산국으로 부상하여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국내 중전기기 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政府調達市場이 開放되면 內需市場의 상당부분은 잠식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한전등 정부투자기관의 총 구매액 1조 6천억 원 중 75%정도가 개방될 것으로 보여 상당규모가 외국업체에게 잠식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우려는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의 기술구조가 일부 분야에서는 사양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先進國 기술의 模倣·改良단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보다 양질의 전기·통신서비스가 요구되면서 수요기관이 조달하고자 하는 중전기류의 수준이 높아질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만일 국내의 기술 및 공급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면 궁극적으로 내수시장의 상당부분을 해외업체에 蠶食당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중전기기의 조달규모는 매우 급속히 신

장하고 있는 반면, 이들 품목의 국제경쟁력은 최근들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 IV. 對應方案

GATT 政府調達協定에 加入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國內調達市場을 開放할 경우 과거의 部門別, 段階別 市場開放과는 전혀 달리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이 광범위하게 파급될 것에 대비하여 國內産業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될 것인데,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先進國들이 GATT 政府調達協定の 基本原則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貿易障壁을 세워 國內産業을 保護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GATT 政府調達協定 과정에서의 주요 관심사항인 讓許機關 및 讓許品目的 設定에 대해서만 너무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政府調達關聯 法規, 技術明細, 原產地規程, 入札節次 및 入札自格審査基準 등을 再檢討하고 調整하여 先進國과 유사한 形態와 水準의 調達體系를 갖추으로써 先進國과의 通商摩擦을 피함과 동시에 國內調達市場의 開放時 國內産業이 받을 타격도 最少化 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있어 중전업계는 특히 한전과 전기통신공사의 양허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전력생산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民營會社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協定加入國들 중 韓電과 유사한 기관을 양허한 예는 없다.

아울러 통신분야 역시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양허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가입국들은 우리나라의 한전, 전기통신공사의 양허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개방 압력은 계속 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전기 업계는 소극적 對應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술개발과 供給能力의 改善등 보다 근본적인 대응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원천설계기술, 소재 및 부품가공기술 등과 같은 취약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

만이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이 지향해야 할 최대의 목표인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協定加入國들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찰참가 노력이 필요하다. 國際入札에서 입찰정보에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協定加入國에 무역관을 두고 있는 KOTRA 등 무역유관기관의 관계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의 즉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시장정보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응찰기회 확대는 물론 이들 기업의 國際化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공업진흥회는 중전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해 『중전기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그에 기초한 기술개발 촉진, 중전기 산업구조의 선진화, 각종 지원제도의 개선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조사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기공업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기획 제공, 신제품 개발 의욕 고취 및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산 제품 인식제고와 국제화를 유도하고 수출다변화를 촉진기 위해 『국제종합 전기기기전』을 개최코자 준비중에 있다.

정부에서도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투자 정책 및 제도개선, 품질향상,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업계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설비투자 확대와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 우리산업을 무역흑자국, 수출주력산업으로 전환하고 기술도입국에서 기술수출국으로 탈바꿈하여 세계 주요 생산거점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정부조달협정의 가입이 우리나라가 선진무역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우리 중전업계도 자신감을 갖고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정부조달협정가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산업의 國際化, 先進化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